

## 일상의 금융화와 탈정치화의 정치

최철웅\_『문화/과학』 편집위원

### 1. 들어가며: 금융 위기와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위원회(FRB: 이하 연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소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내 2010년 그리스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인 채무 위기로 재점화되었다. 2000년대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의 적자국들은 구제금융을 대가로 긴축정책과 노동시장의 개혁 등 고통스러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los indignados)을 위시해 유럽의 민중은 “그들의 긴축에 맞서 우리의 민주주의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경기회복을 내세워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대중투쟁을 펼치고 있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채무 위기는 최근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등 완화되기는커녕 주변국들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유럽 국가들의 채무 위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용에 의거한 거품경제가 꺼지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으로, 따라서 사실상 이번 위기는 주변부 나라들의 국내 은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요 은행들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은행들이야말로 유럽 주변부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상황에 엄청난 규모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sup>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임시적으로 주변부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강제함으로써 자국의 은행들에 대한 구제비용을 주변부 국가들의 민중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직면해 은행과 채권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강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광경이다.

선진국에서의 연이은 금융 붕괴는 1970년대 말 이래 서구 세계와 다른 많은 지역들을 사로잡았던 경제에 대한 관념을 한때 위태롭게 하는 듯 보였다.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 질서는 물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좌·우파를 막론해 터져나왔고, 금융자본의 본산인 월가에서 맑스의 『자본론』을 읽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때 다소 느슨하게 통용되는 신자유주의의 교리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믿음을 의미한다. 자유시장이야말로 개인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고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와 정치는 비효율적일 뿐더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기 십상이라는 것.

1) 이시드로 로페스·엠마누엘 로드리게스, 「스페인 모델」, 『뉴레프트 리뷰 2013/4』, 길, 2013, 54. 스페인은 1995년 이후 10년 동안 7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4퍼센트에 달하는 등 2008년 금융 재난이 터지기 전까지 유럽 지역 내에서 활발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주택 가격은 1997년과 2007년 사이에 220퍼센트나 오르면서 건설업 호황을 이끌었고, 2007년이 되면 민간의 주택 소유는 87퍼센트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말경이 되면 미분양 주택이 1백만 호에 이르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그에 이어 이들에 대출을 주었던 저축은행들도 엄청난 악성 부채를 떠안게 된다. 이처럼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신용 수축과 더불어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세수도 급격히 줄면서 이윤과 채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따르면 은행과 투자자들이 최첨단 금융공학의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시장이야말로 순수한 시장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틴 울프의 말을 들어보자. “성공적인 금융 시스템이 이룩한 성과를 잠시 생각해 보라. 그것은 수천 명 혹은 수백만 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적당한 비용에 공급하여 수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다양한 외부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기성 업체에 도전하도록 돕고, 자금의 재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평생에 걸쳐 큰 비용을 계획적으로 분산하도록 허용하고, 삶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제공한다.”<sup>2)</sup> 울프처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이들에게 금융위기는 투자자들의 지나친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인간 습성의 문제거나, 위험을 감수하도록 보증함으로써 선택의 왜곡을 낳는 정부의 불완전한 개입 탓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의 위험 감수에 대한 무제한적인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수 관계자 간 거래를 방지해야 하며, 파산한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무거운 손실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sup>3)</sup>

물론 이러한 조처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금융의 동학과 다소 동떨어진 주관적 소망의 투영에 불과하다. 당대의 금융시장을 특징짓는 폭발적인 과잉거래와 단기적 거래차익의 추구는 오히려 금융에 내재한 고유의 불안정성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성공한 투기는 ‘순수’ 금융이윤이란 독특한 형태의 금융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자금 관리자는 이 소득을 자산 계정에 기입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투기적 운용은 어느 정도의 통화 및 금융 불안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시장이 지나치게 안정되어 있을 때 운용자들은 거리낌없이 ‘지겹다’고 고백한다.”<sup>4)</sup>

2) 마틴 울프, 『금융공황의 시대』, 김태훈 옮김, 바다출판사, 2009, 52.

3) 같은 책, 52-53 참고.

4) 프랑수아 세네, 『자본의 세계화』, 서익진 옮김, 한울, 2003, 55.

오늘날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통해 부를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배적인 공공선(common good)의 지위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증하고 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놓여진다. 즉, 금융자본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논리와 정책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그리하여 “금융위기는 은행들 자체와 은행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위기의 해법은 여러 나라에서 딱 잘라서 복지 국가와 공공 지출을 삭감할 필요성으로 재정의”<sup>5)</sup>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말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전환 자체가 금융지배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금융자본의 이해가 사회적으로 최우선시 되는 데에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금융적 실천을 통해 영위되고, 나아가 금융자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소비자로서 신용카드로 할부구매를 하고, 노동자로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쓰고 있다. 재테크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만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제시되며, 불안한 노후에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연금과 보험 그리고 수십 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며 힘겹게 장만한 아파트 한 채뿐이다. 우리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자본시장의 성쇠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랜디 마틴은 개인들이 투자자로 변신하고 일상생활이 금융시장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상황을 ‘일상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라고 한다. 마틴에 따르면, 오늘날 금융은 더 이상 단순히 은행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자아

5) 콜린 크라우치,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유강은 옮김, 책읽는수요일, 2012, 7.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이유를 신자유주의가 흔히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유 시장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지배와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늘날 산업그룹들이 금융 세계화의 능동적 주체들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단도 가능하겠지만, 금융자본의 동학을 강조하는 본고의 논의와는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산업그룹들이 금융 세계화에서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에 대한 분석은 세네의 『자본의 세계화』 제10장 ‘산업그룹, 금융의 세계화의 능동적인 주체들’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획득의 수단이다.<sup>6)</sup> 또한 “일상의 금융화 현상은 노동자계급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주체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문화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윤율이 저하된 시대에 개인들로 하여금 각자의 미래 가치를 앞당겨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축적을 지속하는 메커니즘”<sup>7)</sup>이기도 하다. 즉, 일상의 금융화는 대중들이 소비자신용과 채무를 통해 금융시장에 연루되었다는 경제적 현실만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형을 함축한다. 본고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금융화가 발생한 원인과 그것이 일상생활로 확대된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지배구조의 확립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개

20세기 자본주의의 동역학에 관한 아리기의 연구는 19세기의 영국과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세계 헤게모니’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석한다. 세계 헤게모니 국가는 국제적인 정치적·경제적 질서를 자국의 이익과 결합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아리기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성장의 고유한 동역학을 표현하는 체계적 축적순환의 논리는 ‘물질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의 시기로 구분된다. 헤게모니적 축적체계의 성장기는 산업생산의 팽창을 특징으로 하는데, 성장의 잠재력이 소진되고 자본 간 경쟁이 심화되어 이윤율이 하락하면 이내 ‘징후적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한 위기에 대응해 금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적 팽창’의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적 팽창은 오히려

6) Randy Martin,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2002), 2-3.

7) 박성일, 「일상을 잠식한 금융자본주의」,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52.

위기를 가속화하며, 마침내 금융적 팽창이 붕괴하면 하나의 축적순환은 ‘최종적 위기’를 맞게 된다.<sup>8)</sup>

20세기의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전후 호황기를 구가하던 미국 경제는 196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된다. 1970년대 초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 예상되자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했고, 이에 1971년 닉슨 행정부가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전후 안정적인 국제화폐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화폐보유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초민족적 은행들은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한 탈규제와 자유화 조치를 요구했다.<sup>9)</sup> 금융의 반격은 1980년대 초 볼커의 대대적인 이자율 인상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연준 의장인 볼커는 달러의 신뢰성 회복과 금융소득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금융소득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안정적인 양의 이자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수익률을 내기 어려워진 산업자본은 금융 부문으로 투자를 선회했고, 이후 금융화를 폭발적으로 진전시키게 된다.<sup>10)</sup>

8) 조반니 아리기, 『장기 20세기』, 백승욱 옮김, 그린비, 2008. 아리기의 논점을 수용하는 백승욱에 따르면 실물적 팽창이 금융적 팽창으로 넘어가는 국면과 금융적 팽창국면에서의 위기는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실물적 팽창의 위기가 산업생산물이 제때 팔리지 못해 발생하는 과잉생산 위기의 형태를 띠다면, 금융적 팽창국면의 위기는 과잉축적 위기로 나타난다. 생산된 상품이 실현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과잉 상태가 되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생산에서 이탈하게 된 자본들이 쌓이면서, 그 자본들이 통로를 찾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금융위기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 경쟁이 취약한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고 자본의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보이는 지역에 더 집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그린비, 2006, 286-87). 이러한 관점은 현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터져 나온 배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조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후 1973년까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 1973년 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수백 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한다.

9) 이들의 지속적인 압력 속에 미국은 1974년 해외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했고, 미국과 영국은 1978년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통합했다. 그리고 1979년에 미국이 외환통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은행과 기업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단기적인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10)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백산서당, 2012, 206-14; 백승욱,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970대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수익성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점차 금융적 축적을 추구하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이러한 금융적 팽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국가의 해체와 자유시장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킨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국가의 형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물질적 팽창 국면에 확립된 기존의 국내적·국제적 정책과 제도가 금융적 팽창에 조응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다시 말해 국가의 쇠퇴와 순수한 시장의 복원이라는 상상적 이미지는 신자유주의의 교리 속이나 존재하며,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축적의 한계에 직면한 자본의 재구조화를 뒷받침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2)</sup>

1970년대 말 이후 진행된 금융의 반격은 단순히 자본의 재구조화에 그치지 않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반격’이라는 계급정치의 실행이기도 했다.<sup>13)</sup> 자본

■ 앞의 책, 354-60.

11) 박상현, 앞의 책, 40.

12) 브뤼노프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브뤼노프에 따르면 사적 자본은 축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력과 화폐만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이처럼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과 화폐의 (재)생산과 관리는 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경제적 착취, 잉여가치의 추출은 ‘공장의 전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폭력 혹은 합리성을 통해서도 전개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경제(적인 것)’와 ‘정치(적인 것)’는 동일한 사회적 현실의 두 가지 상이한(‘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측면들이다”(쉬잔느 드 브뤼노프, 『국가와 자본』, 신현준 옮김, 새길, 1992). 이런 관점에서 브뤼노프는 현재 시기의 적대를 국가의 명령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적대로 규정하는 이탈리아 자율주의 운동의 조류에 대해 비판적이다. 계급적대의 장이 객관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국가의 명령 관계로 대체됨으로써(정치와 경제의 결합) 계급에 관한 주관주의적 관점을 띠게 되고, 투쟁이 국가의 합리적 관리로 대체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기호, 신체, 가족, 국가의 ‘정치경제학’으로 전개됨으로써 오히려 반사된 형태의 ‘경제주의’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상품형태와 권력 메커니즘이 전면에 나서고, 자본의 측면이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시기 금융의 지배를 기호로서의 자본의 전면적인 침투, 혹은 명령 관계에 기초한 신용의 지배로 보는 자율주의의 흐름들과 중요한 이론적 쟁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 노동의 계급적 타협에 기초해 산업적 팽창을 시도한 케인스주의 관리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권력에 기초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추구를 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추구에 의해 실업이라는 노동자계급 고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자본은 노동자계급에게 비용을 물리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개인의 자유, 해방, 개인 책임 그리고 사유화, 자유 시장, 자유무역 등의 미덕에 관한 무수한 수사로 포장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가혹한 정책들을 정당화했다.”<sup>14)</sup>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추구했던 케인스주의의 재정정책을 대신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의 교리가 전면에서 공격의 수사를 제공했다.

통화주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급진적 대응을 제공했다. 완전 고용 성장이 ‘자국의 축적’에 위협이 되자, 통화주의는 고용 보장의 파괴가 경제 회복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공공 지출의 양이 국가의 재정 위기를 일으키자, 통화주의는 공공 지출과 임금 사이의 케인즈주의적 관계의 폐지를 선언했다. 사회적 통합의 협조 조합주의적 전략이 사회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자, 통화주의는 노동조합들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언했다. 실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통화주의는 시장 자유와 실업의 자연율이 바람직하다고 선언했다. 시장 자유는 모든 민주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기초로 선언되었다.<sup>15)</sup>

이와 같은 정책적 전환은 실업의 증가와 성장의 쇠퇴를 무릅쓰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으며, 이는 곧 노동에 대한 화

13)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자본의 반격』, 이강국·장시복 옮김, 필맥, 2006; 데이비드 하비,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이강국 옮김, 창비, 2012.

14) 하비, 앞의 책, 24.

15) 워너 본펠드, 「통화주의와 위기」, 워너 본펠드·존 홀러웨이 편저,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이원영 옮김, 갈무리, 1999, 65.

폐의 우위, 즉 금융 권력의 지배가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금융 권력의 부활과 함께 금융기관의 활동도 전례 없이 활발해졌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연기금, 뮤추얼펀드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이 시기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산업기업들도 장기적인 산업투자 대신 단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며 금융수단에 투자했고, 정크본드(junk bond)를 통한 차입매수를 중심으로 거대한 인수·합병의 물결이 폭발했다.<sup>16)</sup> 가격 변동성의 증대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금융 차익거래(financial arbitrage)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고,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투기나 금리차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캐리 트레이드처럼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기적 거래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도 활성화되었다.(물론 애초 목적은 리스크 회피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리스크를 이용한 돈벌이로 곧잘 사용되었다.)<sup>17)</sup>

기업 경영에서도 ‘주주가치 경영’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주로 초국적 기관투자자들이 이루어진 증권의 소유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보다 현재의 기업잉여 중 금융자본의 분배 몫을 늘리는 단기적 수익성 증대에 더욱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경영자들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원리에 신속하게 적응했고, 주가 극대화 와 자본수익성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단기 주가 극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스톡옵션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주식시장에서의 성과와 연동되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삼게 된 것이다.<sup>18)</sup> 이로 인해 “노동 유연화, 설비투자 감소, 생산공장 폐쇄, 여타 기업기능 아웃

16) 박상현, 앞의 책, 256.

17)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67-68.

소싱 등 구조조정과 탈산업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주주가치에 기여”<sup>19)</sup>하는 노동역압적 경영전략과 관행들이 확산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금융혁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채를 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전환시키는 ‘부채의 증권화’라는 현상이었다. 전통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던 은행은 수익성이 낮아진 대부업무에서 벗어나, 대부한 부채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변모시켰다. 부채의 증권화와 함께 주택 모기지, 자동차 대부, 신용카드 매출채권, 학자금 대출금 등 은행의 금융자산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 즉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이나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으로 변모했다.<sup>20)</sup> 이로 인해 애초 위험성을 지니던 부채는 수익성을 높이는 증권으로 변모했고, 부채를 증권화하여 판매한 은행은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 그에 따른 위험까지 떠넘길 수 있게 되었다. 마라치의 설명을 빌자면, 이러한 증권화의 연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금융증권화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회사 입장에서 볼 때, (모기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같은) 고객 대출 상품을 투자은행에 판매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개선하게 해준다. 투자은행은 (양호부터 불량까지) 차등적인 리스크에 따라 신용 풀을 만들며, 이것을 기초로 자산을 발행한다. 다음으로 발행된 자산은 임의로 창출된 금융회사(이른바 콘듀잇이나 특수목적회사)에 양도되고, 이들 회사는 매입 대금을 단기 채무로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퇴직연금, 투자기금과 같은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일이 계속 잘 풀린다면) 아무개의 모기지 부채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된다.<sup>21)</sup>

18)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후마니타스, 2009, 43-44.

19) 지주형, 앞의 책, 100.

20) 박상현, 앞의 책, 267.

21) 크리스티앙 마라치,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3, 47. 한편으로 이러한 증권화 과정은 일종의 화폐를 창출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채권 흐름의 분할은

금융증권화를 통해 금융자본은 더 이상 산업자본의 가치실현의 한 고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세력으로서 금융적 수익을 축적해간다. 맑스가 말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가장 물신화된 형태”인 이자 낚는 자본(M-M)을 대표하면서, 어떠한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도 무관하게 마치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것처럼 현상하는 것이다. 증권화와 파생상품 기법으로 무엇이든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생산을 조직하는 일 없이도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들은 생산 부문에서 태어났으며 또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포획한 실물자원들 중 가장 큰 부분의 가치실현 또는 ‘결실’이 채권과 주식, 즉 미래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채권증서들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권들 이른바 금융자산들은 이중의 가상적 차원을 가진다. 그것들은 이차 증권시장에서 고유의 생명을 가지며, 여기서 그것들은 가치의 상승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은 금융운용자들 사이에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나 협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금융자산들은 그 시세가 폭락하여 더 이상 “종이 누더기”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생산, 무역 및 금융시장들을 동시에 요동치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축적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또는 국가채무의 지불정지 심지어는 지불거부로 귀결되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화폐자본’이나 ‘금융자본’의 범주에 속하는 자본은 새로운 가치와 부의 생산에서 형성되는 일차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잠식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며 또 성장한다.<sup>22)</sup>

이러한 가상적 성격으로 인해 금융영역이 ‘자율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본질적으로 금융증권화를 통해 신용을 증식시키기 때문이다”(48). 이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22) 세네, 앞의 책, 294-95.

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들이 감춰지고, 금융영역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들이 실제로는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일부라는 점이 은폐된다. 오늘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형태인 ‘화폐물신’(“돈이 돈을 번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 3. 한국사회의 금융화와 부채경제의 정치학

한국사회는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 시절 금융자유화를 통해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재벌의 투자와 지구적 경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세계화’를 기치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진행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였다. 1997년 이전의 자본자유화가 재벌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1997년 이후엔 IMF의 주도 하에 월가의 금융자본과 외부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투명화와 자본자유화가 전면화되었다. 은행과 기업의 경영에서 BIS 비율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금융적·재무적 논리가 중시되었고, 외국인 주주의 압력으로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주주가치 경영이 확산되었으며,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 부문에서도 금융자산의 매출과 수익은 물론 스톡옵션과 주식배당이 증가하는 등 금융적 축적이 확대되었다.

노동유연화를 위시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억압 정책이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억누르면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가계소득은 정체되었다. 재무구조 개선의 압박 하에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축소하고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줄여나간 데다, 부실기업 정리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재벌들이 국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임금을 하향 압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생산의 글로벌화를 통해 언제든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었고, 그러

한 위협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 기업들이 고용 구조의 차별화와 성과주의의 도입 등으로 노동자들을 내부에서 분할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탓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도 약화되었다.

이처럼 금융적 축적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노동이 약화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 되면 거시경제상 수요 부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을 실현하는 문제(즉, 잉여가치 상품의 판매)는 비임금 소득을 통한 소비에 의존한다. 이러한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부채를 통한 임금생활자의 소비 때문이다.”<sup>23)</sup> 따라서 마라치에 따르면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해 ‘기생적’이지 않으며, “소비의 증진을 가져오는 지대 창출 능력, 즉 GDP 성장에 필수적인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역량”<sup>24)</sup>을 통해 허구적 이윤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가계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저축률 감소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대<sup>25)</sup>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이전까지 정부는 은행예금을 기업 대출로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예금 금리의 상한선과 소비자 대출 옵션을 제한해 소매 금융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억제했다. 그리하여 별다른 자금 운용 방법이 없는 가계와 개인들은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은행예금으로 저축했다. 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정부도 앞장서 과소비 행위를 지탄하고, 저축을 도덕적인 행위로 장려해왔다. 1990년대 말까지는 주택 용자도 주택은행이 독점했고 부동산 담보대출 규정도 극도로 제한적이어서, 고객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치의 30퍼센트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1차 주택용자의 개인당 최고한도는 5만 달러에 불과했다.<sup>26)</sup> 따라서 신자

23) 마라치, 앞의 책, 42. 강조는 원문.

24) 같은 책, 60.

25) 1990년대 20%대를 유지하던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평균 3% 내외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기준 약 1,000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백서』, 2013 참조).

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낮은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의 감소를 겪으면서도 한국사회가 2000년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한 것은 생산적 투자와 고용 증대가 아니라 ‘금융에 기초한 경기회복’의 효과였던 셈이다.<sup>27)</sup>

IMF의 구조조정 처방을 이행하던 김대중 정부는 투자 부족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1998년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자 ‘내수 진작’의 요구에 직면했고, 소비자 금융의 활성화와 규제 철폐, 금리 하향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다.<sup>28)</sup> 소비자 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먼저 신용카드업 활성화였다. 1999년부터 신용카드 수요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 제도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대 업무(일반 대출, 어음할인 등) 비율 규제 폐지와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월 70만원) 폐지 등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신용카드 시장 개방 조치로 현대와 롯데가 2001년 이후 신용카드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체제로 돌입했다. 회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은 카드발급 남발로 이어져, 길거리에서 발급 자격이나 심지어 신분증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급되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수와 사용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2002년에 접어들면 총 1억여 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가 4.6개로 증가하게 된다. 카드 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쳤고 카드 회사들이 2000년 한 해 동안 모집인에게 회원 유치 대가로 지급한 보수만 1,928억 원에

26) 김순영, 『대출 권하는 사회』, 후마니타스, 2011, 31-32.

27) 크라우치는 이처럼 신자유주의 국면 하에서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빈곤층을 포함한 개인과 가구가 빚을 떠안는 현상을 “사유화된 케인스주의” 모델이라 부른다(크라우치, 앞의 책, 169).

28) 1998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이후 발표된 후속조치는 통화의 신축적 공급 및 콜금리의 추가적인 하락과 은행 대출금리의 인하 유도, 주택 수요자 금융 확충과 은행을 통한 소비자 금융 지원 확대,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5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순영, 앞의 책, 50).

달했다. 카드업체의 경쟁과 성장은 당시 TV를 켜기만 하면 흘러나왔던 각종 광고들에서도 확인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부자 되세요” 등 아직까지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광고카피를 내세워 카드회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광고를 퍼부었다. 2002년 신용카드 5개 업체의 4대 매체에 대한 광고비는 약 1,300억 원에 달해 1998년과 비교해 무려 30배 이상 증가한 액수를 기록하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의 폭발적 증대에서 눈여겨볼 점은 현금서비스 사용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연회비나 가맹점 수수료보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주요한 수익원이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카드사들은 사용자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연체료를 물렸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강박적인 추심을 통해 부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규제완화로 인한 신용카드 회사의 과당경쟁과 발급 남발은 결국 2003년 카드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카드대란’과 2004년 말 기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sup>29)</sup> 문제를 낳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탈적인 개인들의 문제<sup>30)</sup>로 치부되었고, 카드남발로 이득을 챙긴 것은 결국 정부와 카드회사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약 7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국경제는 IMF 조기 졸업을 선언했는데, 민간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15.8퍼센트에서 2001년 약 35퍼센트로 증가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용카드가 내수 진작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또한 2001년 삼성 등 3개 카드 회사의 초과이익이 평균 8,403억 원에 이르는

29) ‘신용불량자’는 개인이 대량채무를 지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특징적인 주체성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

30) 김순영은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으로 과소비 대신 소득감소와 허약한 복지체계를 들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들에게서 ‘카드 돌려막기’가 성행했음을 근거로 신용의 상품화와 약탈적 대출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구조적 힘이었다고 진단한다. ‘카드 돌려막기’는 본질적으로 복리계산으로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부채를 갚고자 돌려막기를 하면 오히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나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 추심에 몰린 사람들은 마지막 탈출구로 살인적인 고금리를 물고 대부 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하며, 결국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빚만 늘린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등 카드회사들도 현금 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sup>31)</sup>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이용한 계층이 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한 중하위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부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대출보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저금리 기조가 자리 잡으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활발해졌고, 자본자유화 조치로 인해 국내은행의 차입이나 외국인의 주식투자 등을 통해 해외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외화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기조가 경향적 현상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우리나라 통화 당국도 정책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로 인해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고, 담보가 보장돼 기업보다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sup>32)</sup> 이는 투기적 수요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연이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한국인들의 욕망을 지배한 ‘부동산 열풍’을 낳게 된다. 특히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어 유동화가 용이한 아파트는 중산층의 상징이자,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보장하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 거품’을 주도했다. 데이비드 하비가 2차 순환 축적이라고 부르는 건조 환경에서의 자본순환을 통한 축적의 메커니즘이 진행된 것이다.<sup>33)</sup> 사실상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공히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일으키는 건설과 토목사업에 의존해 왔다. 2000년대 한국의 경제회복은 상당부분 금융-부동산 개발의 순환 회로에 의해 이루어졌던 셈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은 액면가치상의 부를 증대시키며, 그로 인한

31) 이상 신용카드와 관련한 내용은 김순영의 책 2-5장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32) 한국금융연구원, 앞의 자료, 77-78,

33) 데이비드 하비, 『자본의 한계』, 최병두 옮김, 한울, 2007.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추가대출이나 소비를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여건이 좋은 경우 이것은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결국 자산가치가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고유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대출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한 경우 미래 소득의 흐름을 현재화시킨 것이기에 더욱 더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와 주변에서 들려오고 목격되는 ‘대박 신화’에 힘입어 투자수요는 꾸준히 증가했고, 저금리 기조와 우호적인 대출 조건 하에서 대출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성행하게 되었다. 미셸 아글리에타는 신용과 자산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용은 자산 시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자산 시장에서 가치분 저축만 운용된다면 이 시장은 그 자체로 고유의 한계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이를 획득하기 위해 구매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그들의 저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동원 가능한 저축액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이라면, 통상의 재화 시장에서처럼, 수요는 줄어들고 그래서 자산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영역에서는 사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 핵심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자산의 획득이 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이 늘어날수록 자산 가격은 더 오르고, 차입 유혹을 받는 구매자의 수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신용을 받기 위해 가격이 상승 중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자산가격의 디플

34) 미셸 아글리에타, 『위기, 왜 발발했으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익진 옮김, 한울, 2009, 12-13.

레이션이야말로 과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과 같이 구매 이후에도 가치를 유지하는 비소모재의 경우 가격 상승은 동시에 가치의 상승이며, 소모재나 서비스 상품과 달리 인플레이션에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 및 자산에 근거한 소득은 논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 체제 아래서는 통상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생겨난 소득 가운데 자산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성공을 구가한다. 연봉 가운데 주식 옵션으로 지불된 부분과 연봉과 임금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 근거한 모기지 확대를 통한 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sup>35)</sup> 그리하여 자산 가격이 폭등한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더욱 높은 자산소득을 누렸으며, 이로 인해 계층 간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36)</sup>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부의 증대 가능성을 높이는 ‘신용의 민주화’라고 상찬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개인과 가계에 차별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며, 부를 불평등하게 재분배한다. 빈민과 하위층에겐 더욱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은 이들 집단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고율의 이자를 책정하며, 담보여력과 상환능력이 높은 상류층에겐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사회적 논리로부터 벗어난, 순전히 수리적인 계산에 의거하는 금융적 포섭과 배제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현 주택 보유자가 상승분에서 얻는 이득은 미래의 구매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사람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이 금융 시장과 연결된 상황에서 금융 시장은 대단히 불평등하게 작동하면서 극단적인 부의 집중”<sup>37)</sup>을 낳고 있을 뿐이다.

35) 크라우치, 앞의 책, 171.

36)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참조.

37) 크라우치, 앞의 책, 172.

#### 4. 금융적 주체의 두 얼굴—투자자와 채무자라는 형상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금융적 실천의 또 다른 영역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저축이라 일컬어지던 영역에서의 질적인 변형이다. 금융화가 글로벌 자본이나 금융기관의 영역을 넘어 가계와 개인의 경제적 실천의 장으로 확장되면서, 간단히 말해 많은 저축자들이 금융투자자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소유권, 연금 설계, 뮤추얼 펀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긴밀하게 엮였고, 한때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던 리스크와 계산의 테크놀로지들을 일상적 실천 속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자본 없이도 마치 자본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 담론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시민권’의 보급이 국가 정책의 확고한 목표로 추진되었다.

사적 소유의 확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권력에서 개인들을 보호해 주며 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제공해 준다. 미국을 소유자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더욱 많은 미국인들에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sup>38)</sup>

이는 사회보장과 노동을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인정과 권리를 보장받던 ‘노동자 시민권’에서 자산 소유를 통해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경제적 시민권’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엔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실업자와 세입자가 아닌 자신의 주택과 자산을 소유한 소유주로서 더욱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에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80년 주택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구입할 수 있

38) 미국의 보수적 민간연구소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의 데이비드 보아즈의 발언; 박성일, 앞의 글, 60에서 재인용.

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150만 가구의 임차인들을 주택 소유자로 변모시켰으며, 이를 본뜬 미국의 부시 정부도 2004년 재선을 맞이해 '소유자 사회'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주택 소유와 금융 투자를 독려했다.<sup>39)</sup>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의 닷컴 열풍을 이어받아 김대중 정부가 주도했던 벤처투자와 코스닥 열풍을 통해 '투자의 대중화'가 확산되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거대한 부를 움켜질 수 있다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환상에 힘입어 '벤처창업'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든 젊은 야심가들을 열광시켰고, IT나 신기술을 표방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다. 그러나 신대륙 대신 네트 속으로 '골드러쉬'를 떠났던 이들은 이내 거품 붕괴와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열풍도 이내 사그라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펀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 시작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적립식 펀드 계좌 수는 1,500만개, 주식형 펀드 계좌 수는 1,800만개에 이르렀다."<sup>40)</sup> 한국은 펀드투자보다 주식 등과 같은 직접투자 비중이 더 높은 편이긴 하나, 펀드는 직접투자보다 위험이 적고 간편한 투자 수단으로 널리 선호되고 있다. "뮤추얼 펀드의 대중 마케팅에서 중심적인 전략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인 활동으로 자연화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뮤추얼 펀드 투자는 옷이나 음식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구매행위로 제시되었다."<sup>41)</sup>

이러한 투자 열풍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금융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은 것이지만, 소위 '부자 되기 신드롬'이라 불리는 새로운 문화현상의 전사회적 확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필두로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재테크에 미쳐라!'를 외치는 목

39) 같은 글, 61.

40) 같은 글, 62.

41) Adam Harmes, "Mass Investment Culture," *New Left Review* 9 (May-June 2001), 109.

소리들이 모든 이의 컷전을 올려댔다. 2000년대의 부자는 과거처럼 근면하게 노동해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적 수단과 기술(재테크)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자이며, 노동이 아니라 자산을 굴려서, 즉 ‘돈이 돈을 벌게끔’ 만드는 자이다. 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부자 되기는 모두가 추구해야 할 규범이자 강박이 된다.<sup>42)</sup>

금융 투자자에게 있어 돈은 단순히 거래와 축장의 수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굴리면서 애지중지해야 하는 것”<sup>43)</sup>이며, 시장도 단순히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된다.

현재의 금융 양식은 단순한 스펙터클, 즉 눈길을 끄는 경제적 경관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 요소로서 전시되는 것에 참여하라는 초청이다. 금융은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수행하는 작업의 한 방식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작업의 한 방식이다. 금융적 자기관리의 새로운 모델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돈은 생계를 위해 지출되어야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열망을 포함한다. 돈은 현명하게 투자하고, 사려 깊게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자원들을 배치할 책임을 수반하는 기회이다. 시장은 필수적 소비재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싸워 이겨야만 한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경제에 대해 이겨야만 한다.<sup>44)</sup>

즉, 금융은 어떤 경제적 영역에 대한 표상에 그치지 않으며, 주체의 수행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실천 그 자체가 된다. 금융은 단순한 은행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 할당, 명료한 계산, 간섭받지 않는 자기통제, 끊임없는 산출의 확

42) 최민석,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상생활의 금융화와 투자자 주체의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4장 참조.

43) Randy Martin, op. cit., 6.

44) Ibid., 17.

대”<sup>45)</sup>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금융적 규범은 2000년대에 폭발적으로 보급된 모든 재테크 지침서들의 공리를 구성한다. “돈을 위해 일할 때 그 힘은 우리가 아닌 고용주에게 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 때에는 우리가 그 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sup>46)</sup>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적이고 윤리적 삶의 태도야말로 진정 중요한 문제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돈을 벌어들여 금방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금융은 단지 부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계발하고 개선하며,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보장해준다. “금융화는 가장 숭고한 직업마저도 우리가 평생 응답할 수 있는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 자아를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한다. 그것은 불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돌리는 고도로 신축적인 자기-지배의 양식을 제공한다.”<sup>47)</sup>

금융적 실천에 고유한 합리성은 특수한 계산적 합리성과 ‘리스크 관리’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이해야말로 과거의 저축이나 보험과 다른 투자 행위의 특수성을 구성한다. 저축과 보험이 리스크를 위협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서 계측하고 관리한다면, 투자행위에서의 리스크는 인센티브이자 잡아야 할 기회로서 표상된다. 불확실성은 측정 불가능하지만, 리스크는 계산적 행위에 의해 개연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예측과 전망이 옳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수량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계산 가능한 위협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협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니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위협

45) Ibid., 2.

46) 기요사키·레흐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형선호 옮김, 황금가지, 2000, 145; 최민석, 앞의 글, 73에서 재인용.

47) Randy Martin, op. cit., 9.

성을 사고파는 게 가능해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최신의 금융공학으로 무장한 금융기관들이 벌인 불장난이 바로 이러한 ‘리스크 거래’였다.

모기지를 증권화하여 투자은행 등 다른 거래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리스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이때 가격은 대출의 실제 위험성이 아니라 유통 시장에서의 그 위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 유통 시장은 글로벌화된 금융환경에서 여러 확대된 거래의 연쇄로 매우 빠르게 발전해 간다. 거래의 연쇄가 길어질수록 ‘믿음에 관한 믿음’의 연쇄도 길어져, 애초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서 조금씩 왜곡이 발생하나 더 높은 가격에 리스크를 구매해줄 다음 거래자가 존재하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 리스크에 대한 애초의 평가보다 유통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해지자, 유통시장에서의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가라는 물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경마장에서 돈을 거는데 말이 한 마리도 달리지 않는 것과 같았다. 내기는 오로지 다른 도박꾼이 얼마를 걸지에 관한 추정만을 반영했다. 결국 신용 평가 기관들은 신용 평가의 토대를 유통 시장 자체에 두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회계 시스템조차 바뀌었다. 그 결과로 회계사들은 노동력, 자본, 시장 등의 가치에 비추어 한 기업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의 주식 시장 가치, 즉 다른 거래자들의 믿음에 대한 거래자들의 믿음에 의해 형성된 가치만을 보았다.”<sup>48)</sup> 크라우치는 이러한 낙관이 각국 정부가 시스템이 망가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구제금융에 대한 거래자들의 확신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확신은 결국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리스크는 비단 금융거래의 테크놀로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관리의 테크놀로지가이기도 하다. 투자자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리스크를 오히려 삶의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이며, 자기규율적인 리스크 관리 실천을 통해 자아를 계발해가는 자들이다. 당신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은 쪽에 판돈을 건다면, 본

48) 크라우치, 앞의 책, 151.

전은 건질지언정 ‘대박’을 터트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위험을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시각각 급변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이 아니라 자유와 기회의 열린 장으로서 다가오게 되며, 나아가 리스크 관리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 된다. “리스크 회피는 자신의 인생을 남들에게 관리당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계산 착오에 종속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sup>49)</sup>

우리는 이러한 능동성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 중첩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윤리에 따르면 우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와 끝없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역량과 서비스를 1년 단위로 기업에 판매하는 1인 기업가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현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 떠나면 될 것이다. 실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다. 설령 누군가 당장 직업이 없어 노숙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는 여전히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며, 부단한 경력개발과 자기관리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야말로 우리 시대의 성공한 1%의 자아들이 공유하는 자질이며, ‘기업가 정신’의 본령을 이루는 것이다.<sup>50)</sup> 국가와 개인, 자본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모든 사회적 정체성의 구분이 소실되고 창 없는 모나드와 같은 1인 기업가들의 무한경쟁만이 존재하는 세상. 이곳엔 국가의 억압도 없고, 자본가의 착취도 없고, 기득권의 지배도 없다. 다만 성공한 개인과 실패한 개인이 존재할 뿐이다.

투자자가 금융적 주체의 낙관적 형상이라면 그 이면에는 그늘진 채무자의 형상

49) Randy Martin, op. cit., 106.

50)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개발의 의지』, 돌베개, 2009, 4장 참조.

이 놓여 있다. 대출은 관점에 따라 신용이나 부채로 불린다. 신용(credit)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와 기회를 얻는 수단으로서 낙관적인 전망을 표현한다면, 부채(debt)는 있지도 않은 미래를 저당 잡힌 무모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다. 대출기관들은 보통 경제가 성장세이고 낙관적일 때에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권장하다가,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채무자에게 온갖 부도덕한 평판을 뒤집어씌우면서 상황을 재촉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두를 주주로, 모두를 지주로, 모두를 기업가로’라는 주체의 실현상은 우리를 자신의 운명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죄를 지은 ‘채무자’라는 실존적 조건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sup>51)</sup>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모두 잠재적으로 ‘사회적 채무자’들이다. 국가와 공공부문의 지출이 공채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조세의 일정 부분이 ‘채무원리금’의 지불을 통해서 금융부문으로 끊임없이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나타났듯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추동하는 가운데 국가가 진 채무의 원흉을 사회적 지출에서 찾아내어 그것의 삭감을 요구한다. 사회보장을 통해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던 빈민들과 노동자들이 투자자들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간접적으로 상환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강내희는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현재를 미래보다 우위에 두는 ‘시간의 경제’를 통해 작동하며, 이것이 ‘미래할인’이라는 관행으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구조한다고 말한다. 금융은 미래의 가치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 시점에 가치화하는 계산 기법을 활용하는데,<sup>52)</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채무자는 결정과 선택의 가능성으로서 열려 있는 미래를 박탈당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금융자본이 미래를 선취해 현재

51)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부채인간』, 허경·양진성 옮김, 메디치, 2012, 27.

52) 강내희, 「미래할인의 관행과 일상문화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92호, 2011년 겨울.

의 부를 축적한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힌 채 현재에 구속된다. “부채는 피고용자와 국민 전체의 현재 시간표를 전유할 뿐만 아니라 비연대기적 시간, 곧 각자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를 전체로서 선취한다.”<sup>53)</sup> 예컨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2~3년의 짧은 유예기간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학업이나 거주에 자유를 누리지만, 이내 몇 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금융자본의 통제구조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부채를 매개로 공장 문을 넘어 사람들의 재생산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과 미래를 자신의 통제와 지배 하에 두고 있는 것이다.

## 5. 나가며: 일상의 금융화와 탈정치화의 정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증권화와 파생상품 기법을 통해 사회적 삶의 모든 것들을 상품화하고, 새로운 행위자를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통해 축적을 확대한다. 날씨파생상품과 같이 자연현상도 거래되는 상품이 되며,<sup>54)</sup> 과거에는 금융시장과 거의 무관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도 퇴직연금<sup>55)</sup>을 통해 금융투자 메커니즘에 통합된다. 주식 및 펀드투자,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긴밀히 엮이게 되고, 개인적 소득의 증대와 재산권의 향유를 추구하는 개인화된 투자자들로 변모한다. 이처럼 대중 투자 문화와 ‘사회보험의 사유

53) 라자라토, 앞의 책, 77.

54) 날씨파생상품의 원리에 대해선 김흥기,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13(3), 2013. 1, 165-96를 참고할 수 있다.

55)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되어, 2012년 7월 이후부터 설립되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매달 납입금을 내고 퇴직 이후 정해진 급부금을 받는다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금이 가입자의 개별 퇴직계정으로 들어가 개인의 투자실적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진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급부액이 주식시장에서의 성과에 좌우되며, 투자책임을 가입자 개인이 지게 된다.

화’에 기초한 금융의 일상으로의 침투는 “글로벌 금융의 실행들을 자연화하고 탈정치화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호하는 정책들에 대한 동의를 생산해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이바지”<sup>56)</sup>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개인화 및 자기책임성의 이데올로기와 금융적인 계산 및 리스크 관리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적 해결을 추구하도록 강제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이 공통의 위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초했다면, 이제 사회적 안전과 재생산의 책임은 개인적 소득을 증가시키는 투자와 사적인 부채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개인과 가계는 고용불안과 실업, 육아와 질병, 퇴직과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 상의 위험에 대해 민간보험과 펀드, 민간연금을 통한 금융적 해결을 추구하도록 촉구된다. 무주택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의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고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빈민들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활동은 금융적 이윤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며, 금융시장의 고유한 불안정성에 편입된다. 그 결과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사라지고,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금융자본과 권력이 사회적 삶의 실천들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을 통한 사회운동의 시도를 통해 금융의 영역을 (재)정치화 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연기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경, 인권,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 ‘윤리적’인 이슈를 고려하도록 촉구하거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액주주운동 등을 들 수 있다.<sup>57)</sup> 이러한 운동들은 더욱 더 많은 자산들이 금융을 통해 사회화되면서 소유권 자체도 사회화되었으며, 소유권을 나눠 가진 노

56) Harmes, op. cit., 123.

57) Paul Langley, *The Everyday Life of Global Finance* (U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chapter 5.

동자와 주주들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런 맥락에서 한때 피터 드러커는 노동자들의 연기금 펀드가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었다며 요란스레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랜디 마틴은 노동자 연기금의 운용에 있어 소유와 통제는 별개의 문제였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더 부유해지거나 자본가가 되지도 않았다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한다. 소유권의 사회화는 노동의 사회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직접적으로 보증하지 않았던 것이다.<sup>58)</sup> 나아가 이들 운동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투자자들로 제한되며, 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 이로 인해 소유권의 사회화에 대한 주장이 결국 소유권을 개인화하는 데 일조하고 만다는 역설을 낳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자조적인 활동이건, 정부의 사회정책의 일환이건, 대안적 사회운동의 시도건 간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를 ‘우회’하여 직접적인 금융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노동과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금융자본은 금융의 고리를 통과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전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껏해야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술 관료적인 미세조정을 시도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조할 뿐이다. 무엇보다 개인적 소유권에 기초한 ‘경제적 시민권’은 기껏해야 우리를 수동적인 현실주의자로 만들거나 끝나지 않는 채무의 연쇄 속으로 밀어넣는다. 경제적 주권자가 되라는 국가-자본의 명령에 맞서 전지구적 시민권으로 무장한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는 것, 저항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58) Randy Martin, *op. cit.*, 132-33.